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11.7)

1. 한일 정상간 환담(11.4) 관련

□ [일본 정부 동향]

- 일본 외무성은 11월 4일 ASEAN+3 정상회담 기간 중 실시한 각국 정상과의 개별회담과 관련, 외무성 홈페이지에 한일 정상간에 실시한 환담은 게시하지 않음.
- 외무성은 이날 아베 총리가 실시한 개별 회담의 개요를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하였지만, 한일 정상간 환담에 대해서는 개요뿐만 아니라 환담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홈페이지에 소개하지 않음.¹⁾
- 외무성 외무보도관은 이와 관련하여 “ASEAN+3 정상회담 전 대기장에서 악수하고, 자연스럽게 앉아서 대화한 것으로 정식 회담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설명²⁾

□ [일본 언론 동향]

-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정식 회담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 청와대가 ‘단독 간담’ 으로서 발표한 것과 온도차가 발생하고 있다” 고 논평

2. 문 의장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 관련

□ [일본 정부 동향]

- 스가(菅) 관방장관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피해자 배상안과 관련, “타국의 입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다”라고 하면서 직접적인 평가는 회피하였으나, “일본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라고 하면서 배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는 인식을 재차 표명³⁾

1) 「日韓首脳の対話「正式な会談ではない」」『産経新聞』(2019. 11. 7).

2) 「日韓：日韓「対話」ウェブ未掲載 外務省「正式な会談と別」」『毎日新聞』(2019. 11. 7).

3) 「日本政府 受け入れ困難 韓国議長提案の元徴用工寄付金」『静岡新聞』(2019. 11. 7).

- 외무성 내부에서는 “지금 내용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 국회에서 의장이 제시한 방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며 간단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평가
- 문 의장이 제시한 해법은 한일 양국 기업과 양국 국민의 성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것임.
- 다만 일본 정부는 문 의장이 해법을 제안하는 등 한국의 움직임과 관련, “한국 내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당분간 한국 내에서의 강제징용 관련 논의 동향을 주시할 계획⁴⁾

3. 한일 관계 악화가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

□ [동향]⁵⁾

- 닛케이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매출액이 자사 매출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들 14개사에서 2019년 3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약 33% 감소
- 스포츠 의류업체 데상트는 연결기준 순이익이 전기대비 약 82%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2019년 회계연도, 약 7억엔 예상)
- 아사히그룹 홀딩스는 한국에서 전개되는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2019년 12월의 연결기준 순이익 예상치를 약 10억엔 하향 조정한 5억엔으로 전망
- 한편 개별허가 대상품목인 불화수소를 수출하는 쇼와덴코는 “연내에는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4) 「元徴用工問題：韓国国会議長、元徴用工に日韓寄付案 日本政府、議論静観」『毎日新聞』(2019. 11. 7).

5) 「日韓冷え込み、7～9月33%減益、売上比率高いデサントなど14社、不買運動収束見えず。」『日本経済新聞』(2019. 11. 7).